다산포럼

세월호의 아이들과 애도의 정치학

윤 지 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세월호의 충격적인 침몰이 있은 지 200일이 지났다. 자식이나 친족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비통한 시간일 테지만 그와 함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생죽음을 당한 일은 국민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진상을 규명해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당연히 진상조사위에 부여되어야 할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불구의 형태로 타결되었다. 이 지루하고 혼란스러운 여야 합의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미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어떻게 했으며, 정부 여당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게 굴었는지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워낙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덧 상식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드러내준다.

이렇게 국가의 책임을 뭉개고도 정부는 이제 세월호는 잊자고 한다. 민생이 급하고 경제를 살려야 할 시기에 세월호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어떤 죽음이든 그에 대한 애도는 죽은 자를 보내고 삶으로 돌아오는 문화의 형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처럼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애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 진상 규명을 흐리려는 권력이야말로 오히려 유족이 그리고 국민이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잊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죽음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통치자의 명령을 어기고 오빠의 장례를 지낸 후 옥중에서 자결하는 한 여자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안티고네는 사랑하는 죽은 자를 애도해야 한다는 하늘의 법에 따라 '반역자는 장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권력의 법에 맞선다.

단원고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갖은 고통과 수모를 견뎌내면서 줄기차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애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의 요구는 부패와 금전주의의 망으로 묶여 있는 현재의 기성질서를 심문하는 것이기에,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

자식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싶은 애절한 희원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힘으로써 평범한 학부모들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비극적 주인공이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부 불순세력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야말로 그리고 그에 대한 애도야말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억울한 죽음은 그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는 과정에서만 제대로 애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여야가 정치 현실의 명분을 내세워 타협한 법안을 유가족이 두 번이나 거부한 것은 상호간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의미의 통상적인 정치로는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단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굳어진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애도를 통한 망각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야가 불충분하나마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여 이제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소위 진상규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애도를 완성할 정도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별법 논의가 일단락된 것과 같은 시기에 예술가들이 '세월호 연장전'을 벌일 것을 선포하고 예술의 '연장'을 동원하여 세월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하기로 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예술가들의 싸움은 "잊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아이들에 대한 애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맺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연장전을 한다지만, 사실 삶과 사회를 갱신해나가는 그같은 활동에는 시한이 없다.

생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고통스런 죽음의 순간에 대한 기억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라는 명령으로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NGO 칼럼

광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대로 시행해야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지난달 광주ㅅ중학교의 한 담임교사가 성적우수 학생들을 교실 맨 앞자리에 배치하며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광주시교육청뿐 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과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반 전체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화되었지만,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며 일삼는 인권침해가 잔잔히 제기되고 있는 건 엄연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폐쇄되어 있는 건 아니다. 학생자치활동이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하며 수많은 탄압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고,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법, 학생인권조례 등 정부기관과 정치권에서 학생인권 법적 근거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탄력을 받으며 많은 지역에 조례를 뿌리 내렸고, 다양한 지역 교육 정책들을 생산해나가고 있어 학생인권을 보편화해가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2년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광주는 330명(5.6%)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 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체벌, 두발·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대목이다.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80.9%), 강제학습(69.1%), 학생의견무시(65.0%)'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42.4%), 상벌점(46.4%), 학생인권교육 미실시(23.6%)'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대목이며, 앞으로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 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 고

잘 심어야 잘 거둔다

최 용 철
광주지방조달청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種瓜得瓜 種豆得豆)', '뿌린 만큼 거둔다(You reap shat you sow.)'

동서양에 같은 뜻의 속담이 있다. 원시 농경사회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디지털시대까지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통하고 있는 말인데, 과연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걸까?

밭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옥토가 있는 반면 경작하기 어려운 자갈밭과 가시밭도 있으니 심는대로 거두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하지만 소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밭을 가려서 잘 심는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지 이제 만 1년이 지났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입찰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소유주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4만7000여 공공기관과 26만8000여 조달기업이 연간 약 73조원을 거래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G2B(Government to Business) 시스템이다.

또한, 나라장터는 10여 년에 걸쳐 충분히 검증된 정부기관의 시스템으로 2006년엔 유엔(UN)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난 10월 현재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6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공공조달의 옥토'라 할 수 있다.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 목적은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라는 '정부3.0'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조달비리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최근엔 아파트 난방비 비리로 입주민끼리 큰 싸움이 있었던 터라 '나라장터 민간개방'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라장터 민간개방' 1주년이 되는 올해 9월말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한 아파트 단지는 전체 1만3000여개 중 약 16%인 2075개나 된다. 아직까지는 입찰공고가 297건으로 미약한 실정이지만 그 소출은 연간 700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곳곳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이 의무화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나라장터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민간부문에서 더 쉽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은 물론 전자계약 및 대금청구 등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전용 포털을 오픈할 예정이다.

유명 연예인의 아파트 관리비 의혹제기와 거친 육박전으로 탈많은 아파트 관리의 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으며 조달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입주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콩을 좋은 밭에 심고 있는지 관리하고 확인할 최종 책임은 결국 입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라장터의 민간 개방이 아파트 관리비 의혹을 일순간에 불식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라고 할순 없겠지만 입주민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현재의 업체 선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유능한 맞춤형 정부 3.0 서비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민간에서의 나라장터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고 세계가 인정하며 오랜 기간 양질의 토양임이 검증된 '나라장터'라는 옥토에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분야의 여러 사업들도 잘 심고 잘 가꾸어 '신뢰의 황금들판'을 거둬들이길 기대해본다.

社 說

광주시 원전사고 대책 주먹구구식이라니

영광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광주 서구와 북구, 광산구 주민 등 100만 명이 사고 매뉴얼에 따라 1단계 대피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버스로 13시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한빛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의 광주 도착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빛원전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보고회에서 광주시는 한빛원전 사고 발생시 광산과 서부, 북부 지역 주민을 234개 집결지로 이동시킨 뒤 1단계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동구와 남구 구호소 84개 소로 분산 배치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피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00만 명에 이르는 서구와 북구, 광산구 주민을 버스 등으로 이동시킬 경우 교통 혼잡으로 13시간이 소요된다는 예측 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3개 구청도 대피로로 지정한 14개 도로 모두 동구 용산(지원)IC로 지정돼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할 때 광주시가 마련한 매뉴얼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서 광산구까지 35㎞를 기준으로 초당 2.5m의 편서풍이 불 경우 4시간이면 방사능이 도달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피 시간을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보듯 초동 대처 실패는 대혼란과 함께 재앙을 초래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은 결과가 기하급수적인 피해를 키운 것이다.

광주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급 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대피와 안전 등 실효성 있는 사고 대책 강구는 필수다. 한빛원전과 정확한 정보 공유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늘구멍' 취업난 지방대생은 서글프다

다수의 대기업과 농어촌공사, 코트라 등 공기업의 채용시험이 잇따르면서 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상경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경기 전망 속에 취업문은 점차 좁아 들고 있어 지방대생들에게 고난의 상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본격 취업시즌을 맞아 광주 광천동 고속터미널은 매일 새벽 취업준비생들로 붐빈다고 한다. 시험 전날 서울에 상경해 면접, 인적성 검사에 대비해야 하지만 체류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내고 당일 새벽에 상경 버스를 타는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의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1일 숙박요금이 3만~5만5000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용료가 싼 찜질방도 수면실은 금세 동나고 여성 응시생들로서는 홀로 밤을 새우기엔 마땅치 않는 곳이다. 한 곳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어서 매번 친척·지인집을 찾아가기도 어렵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당일 상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취업이 원활하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당장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올 대졸 채용 규모를 작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500~1000명, 300명 정도 감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대졸자들과 소위 취업재수생들은 근래 들어 가장 취업이 힘들어질 것 같다.

지방대라는 편견을 깨기도 힘든 상황에서 취업문마저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당장 이 지역 대학들이 나서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취업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상경버스·취업 준비생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지방의원 의정비

지방의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를 의정비라고 한다.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돼 있는데 여비는 부정기적이다 보니 흔히 의정비라고 하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만을 말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연간 1800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 1320만 원으로 전국 어디나 같다. 반면 월정수당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의원수 등을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통상 의정비 인상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해마다 한차례씩 하던 의정비 심사가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향후 4년치를 한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난 달 말까지 의정비 심사를 마치고 요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주 광주시의 한 구청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구청의 2014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2204만 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해 3622만 원으로 정확히 광역시 구의원 평균이다.

심의위원들은 두차례 회의를 갖고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만큼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과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젊은 인재들의 지원 유도를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10년 차 8급 공무원 수준인 구의원들의 의정비로 어떻게 어깨를 펴고 집행부를 감시하겠느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간단할 텐데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었고 재정력지수 등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다 보니 인상하더라도 의정비 총액은 줄어드는 기현상도 발생하는 구조였다.

심의위원들은 결국 인근 자치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주민 여론조사가 필요없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구청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대비 1.7%(39만 원) 오른 3661만 원으로 결정됐다. 구의원과 주민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법 안에서 이뤄진 고육지책의 선택이었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